

# 내년 총선, 여도 야도 이재명은 잊어라

## 태평로



배성규  
논설위원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비판하고 있다.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끝까지 사수하고 내년까지 방탄 정국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 이 대표가 당권을 쥐고 버텨야 총선에 유리하다고 여긴다. 이 대표 논란이 계속될수록 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여당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포에버 이재명'에 '육중 공천'까지 얘기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택은 방탄 총력전이다. 밀리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여긴다. 영장 심사 자진 출석으로 체포동의안을 정면 돌파할 자신이 없다. 이를 부결시킨 뒤 당 조직을 총동원한 대역투쟁에 나서려 한다.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정에 서야 한다. 1심 판결은 내년 총선까지 아닐 것이다. 여권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도 이재명 논란 속에 치러질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여당 승리는 볼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권이 간과하는 게 있다. '대통령 리스크'다. 대통령실은 여당

대표 경선에 직접 개입했다. 나경원 전 의원을 억지로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를 '국정 해방꾼이자 적'으로 몰았다. 윤심(尹心) 논란으로 내홍을 자초했다. 총선 공천에도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핵심부에선 "대통령실과 내각 쪽에서 출마할 인사가 50명도 넘는다"고 한다. '윤석열 사단'이 대거 총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黨)'을 위한 인위적 물갈이설이 벌써 퍼지고 있다.

이재명 효과만 믿고 무조건 이긴다고 자만하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미

방탄 정국 계속 땀 뻘 총선 승리?尹心 공천 파동이 더 큰 리스크李 효과 믿고 무리수 땀 뻘 내분野 급해지면 '이재명 손절'할 것

'대통령 탈당'과 '신당' 얘기까지 나왔다. 누가 당대표가 돼도 갈등을 피하기 쉽지 않다. 친윤 후보가 되면 대통령실의 입김은 더 세질 것이고, 내리쬐기 공천에 따른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비윤 후보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할 수 있다. 국민은 권력 전횡과 내분을 싫어한다. 국정은 산으로 갈 것이다. 여당은 공천 내분이 생기면 졌다.

여권은 지금 민주당을 업신여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은 서울러도 선거엔 유능한 정당이다. 상향식 공천 제도

는 여당보다 잘 갖춰져 있다. 현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과 공천 갈등 예방 장치도 마련돼 있다. 급해지면 '이재명 손절'까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바보가 아니다. 반면 여당은 외부 영입과 대통령 중심 공천으로 잦은 내홍을 겪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 때 '진박 감발사'나 '육새 파동'처럼 '진윤 공천 파동'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재명에 기대어 총선을 치르려는 건 B급 정치다. 국민을 알잡아 보는 것이다. 만일 이 대표가 총선 무대에서 사라지면 무엇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 여당 선거는 국정 성과와 비전으로 한다. 낡은 잘못에 기대는 건 야당이 하는 일이다. '이재명 약탈'은 대선과 지방선거 때 충분히 봤다. 국민이 총선까지 이 대표만 쳐다볼까. 지금 경기 악화와 물가-이자율 급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다. 여권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정 성과가 절실하다. 이재명 타령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도 언제까지 이 대표 병풍만 걸 건가. 빨리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대표 비리 혐의는 법정에서 이 대표 스스로 가리면 된다. 왜 국정이 아닌 이재명에게 사활을 거는 건지.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정 성과로 승부하는 여당과 합리적 비판 야당의 대결은 국민이 바라는 바다. 그리 되려면 여도 야도 이재명은 잊어야 한다.

## 김준의 맛과 섬 [129]

### 제주 각재기국

고등어가 우리의 국민 생선이라면, 일본의 국민 생선은 전갱이다. 일본 북규슈 비닷가 한 미치노에키(道の驛·도로 휴게소)가 문을 열자마자 줄을 서 있던 주민이 들어와 가장 먼저 찾은 생선이다. 한 마리씩 포장되어 있는 전갱이에는 횡간용(横間用)이라는 표기가 제일 크게 붙어 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아지(鰯)라는 이름과 생선지, 어업조합 명칭,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賞味期限) 등이 표기되어 있다.

전갱이를 회로 처음 먹었던 곳은 남해군 지족마을이다. 멸치를 잡는 죽방렴에 갈치와 함께 들어온 것이다. 안주인이 '매가리회'라며 권했다. 고등어회보다 기름진 맛은 달하지만 담백함이 마음에 들었다. 강원도 고성 거진 어판장에서 늦가을에 펼쳐지는 전갱이

를 보기도 했다.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는 전갱이가 고등어를 잡으러 설치해 놓은 정지망에 걸린 듯했다.

전갱이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 대만산 류를 따라 올라와 제주를 비롯한 남쪽 바다에 알을 낳는다. 멸치나 작은 새우를 좋아해 멸치잡는 그물에 함께 잡히기도 한다. 갈치가 진해만 근처로 유배와 기록한 '우해이여보'를 보면, 여성들이 매갈(鰹鱈)로 젓갈을 담아 배로 가지고 다니며 팔았다고 했다. 전갱이 것이다.

전갱이는 때를 지어 이동하기에 고등어처럼 그물에 대량으로 잡힌다. 지금처럼 보관 시설이 좋지 않아 젓갈이 최선의 가공식품이었다. 제주도에서는 전갱이를 '각재기'라 부른다. 전갱이는 조림이나 구이로 많이 이용하고, 산지에서 회로 먹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국을 끓여 먹는다. 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하니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다. 산란철에 제주 바다를 찾는 전갱이가 많았기에 가능했다.

끓는 물에 손질한 각재기를 넣고 끓인 후 배추를 넣어 다시 끓인다. 마지막으로 강된장을 넣고 간을 맞춘다. 제주 음식이 그렇듯이 조리법은 간단하며 재료는 신선하다. 살이 오른 제철에 잡아 냉동보관을 해서 사철 각재기국을 내놓는 곳도 있다. 서귀포에서는 갈갈하게 각재기 조림을 만들기도 한다. 양식 어업의 사료로 이용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맛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社 說

###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도 입건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지자체 인허가권을 이용해 기업들이 돈을 내게 한 이 대표에게 있다. 하지만 이에 편승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한 기업도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네이버에 40억원을 성남FC에 내라고 했다 한다. 이후 네이버는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성남FC에 돈을 냈다. 자신들의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더구나 그 돈도 먼저 이 대표 측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한 뒤, 그 단체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방식을 취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이 방식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만 네이버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도 비슷하다. 성남시는 2015

년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해 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은 55억원을 냈다. 차병원 회장이 이 대표와 두 차례 만나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33억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이 업체들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후원했고, 그 대표가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인허가 장사"로 규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이 이런 불법적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은 범죄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였다"며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합법이라면 전국 모든 지자체장이 기업 후원을 받고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자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기업을 쥐어짜고 그에 편승한 기업들은 적은 돈으로 땅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뇌물 천국'이 될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뇌물은 직무와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받으면 죄가 된다. 그 뒤에 한 일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이 전국 지자체장들의 인허가 장사와 기업을 불법 가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 '월레비' 뒷돈 243억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

정부의 회계 증빙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거나 부실 제출한 대형 노조 207곳에는 공무원 노조가 29곳, 교사·교수 노조가 13곳, 공기업 노조가 40여 곳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공무원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 전북공무원노조, 한국은행 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심지어 노조 회계 투명화를 추진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유관기관 노조조차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공무원·교사·은행원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할 직업군이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정책 집행하는 공무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교수, 고객 돈을 맡아 굴리는 은행원으로 구성된 노조라면 정부 요구를 떠나 노조 스스로 조합원에서 걷은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씀씀이 내역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이다. 5년간 1500여 억원의 세금까지 지원받으면서 가장 기초적인 회계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이들 노조에 투명함이 아니라 심각하게 불투명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전국 건설 현장은 노조의 폭력 갑질로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

다. 건설 분야 노조의 불법 실태 조사를 벌였던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월레비' 명목으로 뒷돈을 뜯어낸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438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금액은 총 243억원이며, 기사 1인당 갈취액이 연평균 556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비노조원 기사를 쓰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일감을 독식하고 월레비를 안 주면 작업 속도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 횡포를 일삼아왔다. 조폭과 다를 게 없다.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선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가 6명 투입돼 1인당 월레비를 매달 1285만원씩 챙겨가기도 했다. 월급 평균 597만원보다 2배 더 많은 액수를 챙겨간 것이다. 공기업인 LH의 아파트 건설 현장 83곳 중 42곳에서도 월레비가 1인당 월평균 711만원씩, 1년에 총 116억원이 지급됐다. 이런 불법 뒷돈은 공사 비용을 올려 결국 아파트 입주자나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불투명한 노조 회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조 갑질만 바로잡아도 노동 개혁의 절반 이상이 실현될 것이다.

###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한도위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경제 단체들이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지지했지만 표결을 밀어붙였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60일 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노조에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줄 법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을 고용하지도 않은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곳곳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가 법적 사용자이고 합법적 파업인지도 불분명하다. 노조는 파업을 벌여 원청 대기업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은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때 노조원 개

인별로 액수를 계산해 제출하라고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기업의 손해 소송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이다. 피해자보다가 해자를 더 보호하는 위험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타격을 입고 나라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당사를 점거하자 입법을 약속했다. 국민 80%가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자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말장난을 했다. 기업과 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인 민주노총만 바라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 투자를 두려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 이미 지난해 말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건설 공사는 멈춰 서고 최악의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었다. 나라 경제보다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 막가파 광란극에 저주의 굿판까지... 박근혜 이어 윤석열 제거

## 지금 한국 내전(Korean Civil War)이 벌어지고 있다

### 여·야 정쟁도, 보수·급진 다름도 아니다. 남한 운동권, 틈만 나면 촛불반란 획책

지금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야 정쟁? 보수·급진 다름? 노! 한국 내전(Korean Civil War)이다.

2월 1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은 외쳤다. "윤석열의 사냥개가 된 김언 유착 타도.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 타도" 시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인형을 찢고 찢었다. "우리가 진짜 막가파"란 소리도 질렀다.

2월 17일 국회 앞에서 이재명은 외쳤다.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2월 11일 '자주민주평화통일 위원회'란 '떼'는 서울 송례문 근처에서 윤 대통령, 김 여사, 한동훈 장관 사진을 향해 활쏘기 이벤트를 했다.



막가파의 광란극 모습,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 무조건 모든 게 악(惡)?

위 군중 현상의 주제는 뭔가? 대한민국을 세운

역사, 대한민국을 산업화한 역사, 이재명 수사하는 것을 일괄 악(惡)으로 몰아 타도하려 하는 점이다. 어느 역사에나 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71년사건 값진 성취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자유 체제, 시장경제, 한·미 동맹, 세계 6위의 발전상이 그것이다.

남북 주사파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갔다. 결과는 북한 사교(邪敎) 집단의 굿주린 수용소 군도(群島)다. 남한 NL 운동권은 자유대한민국도 민주민주의 혁명으로 뒤집으려 한다. 바로 촛불 시리르다.

###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굿판을"  
"이재명 수사는 야당 탄압"

###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전 세계인들이 먹는 미국산 쇠고기다. 그걸 먹고 죽었다는 사람 있나? '박근혜 굿판'이 사실이었

면, 그후엔 왜 그 소리가 쑥 들어갔나? 아니면 말고? 전과 4번 이재명이다. 그러나 정치범으로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검사사청은 했다. 지금도 '뇌물' '배임' '대복 송금'으로 수사받을 뿐이다.

### 양초가 아깝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그의 자필 결재 등, 이재명 토착 비리 물증(物證)이 차고 넘친다. 이런 그를 두고 뭐, 전국집중촛불 행동? 양초만 아깝다. 자유인들도 총열기할 때다. 힘에는 힘으로, 광장엔 광장으로.

"보수 진보 시위로 극심한 교통체증" 어쩌고 하는 언론들, 시국의 정점이 교통문제였나?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월 20일 게재 되었습니다.

